



주간통일정세 2013-06(2013.02.04~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0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최룡해, 강등 2개월만에 차수 계급 복귀(2/5,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김정은 시대 북한 군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대장으로 강등된 지 약 2개월 만에 차수 계급에 복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8시 보도에서 김일성 주석의 '일당백' 구호 제시 50주년을 기념한 인민무력부 보고회 소식을 전하며, 차수 계급장을 단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모습을 방영함.
 -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차수 복귀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약 2개월 만임. 작년 4월 차수로 승진한 그는 작년 12월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인민군 대장으로 소개돼 1계급 강등당한 사실이 알려졌음.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포상 잔치'(종합)(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평안북도에 있는 낙원기계연합기업소와 자강도의 3월5일청년광산 등 4개 기관과 백계룡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오수용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개인 12명에게 김정일훈장을 수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6일 발표됐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워 정치사상 진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강국 건설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배경을 설명함.
 - 북한은 또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상옥 김일성종합대학 전자재료연구소장과 북한 주민의 정치·문화 지식수준을 향상시킨 도서 '광명백과사전'에 김정일상을 수여

■ 김정은동향

- 2/4, 김정은 黨 제1비서, 베트남 주석 및 이란·이집트 대통령 등 각국 黨 및 국가수반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새해 연하장' 발송(2/4, 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의 일당백 구호 제시('63.2.6) 50돌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 2.5 최룡해*차수 계급장 군복 착용/총정치국장/보고·현영철(총참모장)·김격식(인민무력부장)·현철해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5, 중통·중방·중앙TV)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959호(2.6), 국방력강화와 경제강국 건설에 기여한 단체·일꾼·군인·근로자들에게 '김정일훈장' 수여(2.8, 중통·중방)
 - 단체 : 낙원기계연합기업소, 3월5일청년광산, 강계은하피복공장, 황북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 개인 : 백계룡, 오수용, 김창명, 로경준, 최대일, 박초영 등 12명
- 최룡해 총정치국장,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현지요해(2.9, 중통)

나. 군사

● 北 내부에선 '은하3호'를 미사일 '화성13호'로 전시(2/4, 아사히신문)

-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와 비슷한 기체를 군 무장장비관에서 탄도미사일 '화성 13호'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 평양에서 개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전략로켓관'이라는 동형 전시실을 개설하고 이곳에 각종 미사일을 전시함. 중심부에는 백지에 '화성 13호'로 적은 기체의 실물을 전시해놓았고, 안내원은 이 기체의 지름이 2.4m이고 길이는 26m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서 뜨는 노래는 노동당 찬가 '어머니의 목소리'(2/5, 노동신문)

- 지난달 28일과 29일 평양에서 열렸던 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이후 북한이 특별히 부각하는 노래가 있어 관심을 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이 노래에는 우리 인민 모두를 따뜻이 품에 안아 사랑과 믿음을 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끝없는 신뢰의 정이 담겨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모든 당세포비서들은 노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부르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약수·온천 개발 관련 '광천법' 제정(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약수와 온천 등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제도와 절차를



답은 '광천법'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조선에서 광천법을 채택함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며 "광천법은 광천의 탐사와 개발, 이용,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김정일 지시로 2004년부터 줄기세포 연구"(2/7,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0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7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줄기세포 기술개발에 깃든 사연'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9년 전에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기술과 계놈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함.

● 北 주민 하루 식량배급 400g...작년 4월 이후 최대(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의 지난달 식량 배급량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RFA에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주민 한 명에게 하루 400g의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주민의 1일 식량 배급량이 400g을 회복하기는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임.

● 北 평양 쌀값 7개월 만에 5천원대 하락(2/9, 데일리NK)

- 9일 대북매체 데일리NK가 집계해 공개한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해산의 쌀값은 전달 초와 비교해 1kg당 각각 1천100원, 1천500원, 100원이 내린 5천600원, 5천500원, 6천500원을 기록함.

● 北도 설 분위기...對김정은 충성 부각(2/10,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TV는 10일 오전 8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더욱더 아름답고 희망찬 앞날을 약속하며 설명절의 아침이 밝아왔다"며 "지금 천만군민의 가슴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그이의 영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갈 한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축원인사를 함.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새벽 설명절에 온 나라에 차고 넘치는 것은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고마움과 충정의 일편단심이라며 김 제1위원장의 안녕을 축원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셔 우리의 민속전통은 더욱 활짝 꽃피날 것이고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만방에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美, 모든 경제분야에 제재...경제건설 노력 난관"(2/4,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미국이 무역, 금융을 비롯한 모든 경제분야에서 전면적 제재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우리에 대한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부당하고 악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무역,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 래왕(왕래)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고 주장함.
 - 이어 "현재 미국이 군사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공장설비, 첨단기술로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자산동결, 금융거래 차단, 차관계약 금지, 공해상에서 선박 검색, 금지물자 압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반입과 반출 통제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조선신보, 中 겨냥 "특정나라 자주권 침해 묵인" 비난(2/4,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이른바 '대국'이 미국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사례가 없지 않았고 특정한 나라에 대한 자주권침해를 묵인하는 사태가 반복됐다고 비난함.
 - 신문은 특히 이 '대국'에 대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국가라고 표현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함. 또한,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2)-정전 60년, 동북아 역학구도의 대변동'이라는 글에서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각각 "힘의 논리에 놀아나는 허수아비기구", "정의와 상식을 뒤집는 그릇된 국제질서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함.
- **"北中 '나선농업시범구' 상당한 성과"(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선특구 내 농업시범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 일간지 대공보(大公報)를 인용해 5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성 경제기술합작국 왕즈허우(王志厚) 국장은 지난 1일 대공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선특구 내 농장에서 양측이 합작한 벼농사가



지난해 '대풍작'이었다며 약 87ha 넓이의 논에서 기존 수확량의 배가 넘는 쌀이 생산됐다고 밝힘.

- **北 '북핵선제타격론'에 반발... "상상초월한 대응" 위협(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미국이 대북 핵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한 국과 미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협함.
 - 통신은 이날 '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는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B-2 폭격기를 괌에 배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응한 요격 로켓을 시험했으며, 동해 상에서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책동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이어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 책동에 대처해 핵시험(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다. 이것은 민심의 요구이다"라며 "우리에게는 끝장을 볼 때까지 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이란 없다"고 주장함.
- **작년 북한·중국 교역 60억弗 돌파...7% 증가(2/5, 연합뉴스)**
 -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북한과 중국간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2년도 북중간 교역 규모는 60억3천39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 증가함.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5억3천260만 달러로 11.6%나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25억130만 달러로 1% 늘어나는 데 그침.
- **中, 北 나진항 통해 농산물 운송 계획(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한 함경북도 나진항을 활용한 운송 품목을 다변화하고 화물 운송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방송은 중국 훈춘(琿春)시가 '올해 주요 교통망 운용 계획'에서 나진항 항로를 석탄뿐 아니라 다른 화물 운송에도 활용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훈춘에서 생산된 석탄을 나진항으로 나르던 일방통행식 운송 방식을 쌍방향으로 바꿀 것으로 밝혔다고 설명함.
- **북한, 중국 금융제재 대비 '분주'(2/7, 연합뉴스)**
 - 북한의 무역회사와 각 기관이 중국의 금융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 무역회사 등이 최근 중국에서 회사명을 바뀐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입금된 자금을 빼내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힘.
- **北 "美, 北로켓 발미로 MD시스템 구축 합리화" 비난(2/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기정



사실화해 세계제패를 노린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합리화하려 한다"고 비난함.

- 신문은 이날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흉한 술책'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의 MD 체계 수립책동은 전 지구적인 미사일 망을 형성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제패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MD 체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잠재적 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방향에서 구축되고 있다"면서 "MD 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사면 팔방에서 미사일 공격을 들이대자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힘.

● **북한-중국 종합박람회 올해 확대 개최 합의(2/8, 연합뉴스)**

- 8일 단둥시 무역촉진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린쉐웨이 단둥시 무역촉진회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측 대표단은 북한 국제전람사의 초청으로 지난달 27~28일 평양을 방문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의 명칭을 유지하고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1일 개막하기로 함.

● **중국 훈춘, 작년 북한 출입 인원 급증(2/8, 연변일보)**

- 8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나선 특구, 나진항으로 향하는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의 출입경 인원은 총 35만7천 명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함.
- 신문은 취안허통상구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가 지난해 하반기에 정식 개통하면서 북한을 왕래한 인원이 급증했다고 전함.

● **북한, 경제·군사제재 대응준비 돼 있다(2/10, 봉황(鳳凰)위성TV; 노동신문)**

- 북한 공산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9일 핵실험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 "경제적이나 군사적 제재를 막론하고 모든 대응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봉황(鳳凰)위성TV가 10일 전함.
- 노동신문은 "미국과 '추종세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꾸며내면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엄중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함.

● **北매체, 10여일 만에 중국소식 잇따라 전해(2/1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에 즈음한 김정일화전시회가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서 열렸고 중국 공산당 다롄시위원회, 다롄시 인민대표대회, 다롄시 인민정부 및 공안국, 다롄영기회목유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특히 왕세량 다롄영기회목유한공사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중



조(중북) 친선의 유대가 공고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이 소개했는데, 열흘 만의 중국 관련 보도임.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미국과 추종세력의 이중기준과 적대행위(일본의 정찰위성 발사, 상임이사국들의 미사일 요격시험 목인)는 우리(北)의 초강경 대응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지속(2.5, 중통/횡포한 이중기준은 천백배의 대응을 초래할 것이다)
- 【중통 논평】 美 B-2 스텔스 폭격기 괌 배치, 동해상 韓美연합해상 훈련 등 '적대세력의 가증되는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핵실험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北)가 도달한 최종결론'이라고 위협(2.5, 중통/우리의 선택은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중통 논평】 'UN안보리 對北제재 결의'는 '우리(北)의 자주권 수호와 운명적 문제'라며 "모든 억제력 강화도 미국을 겨냥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북중되는 것은 응당하다"고 '對美 적개심' 고취(2.7,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실험시 제재하면 대응조치 되풀이할 것(2/4, 조선신보)

- 북한은 4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면서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취할 제재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조선신보를 통해 위협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 (3)-제재의 한계, 문제해법은 평화담판'이라는 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조선(북한)이 언명한 '물리적 대응조치'에 대해 또다시 '제재'가 가해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대응조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함.

● 北 "美, '중대조치' 모르면서 핵실험으로 지레짐작"(2/9,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 북한은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후회 막심한 손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 주장함.
-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자 '힘에는 더 큰 힘으로'란 기사에서 "최근 공화국(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한 제재결의를 배격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선포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은 공화국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선제타격까지



- 신문은 6일 자 '최후결판의 국면-유엔결의 후의 전면대결전 (4)-제재의 한계, 문제해법은 평화담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가 초래한 제재 국면에서 새 정부가 취할 행동은 북남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뢰프로세스'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선(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최절정에 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핵화 회담의 종결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남측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문제해결을 시도한다면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봄.
- 신문은 또 "남측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화의 주제로 제기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도 있다"며 "2007년의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수뇌들이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 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고 있다"고 덧붙임.

● 北 '핵선제타격' 발언에 "전쟁 맛봐야"발끈(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핵사용 압박 징후 포착 시 '선제타격'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증오와 격분에 앞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8일 밝힘.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전쟁광증에 환장이 됐다 한들 이렇게까지 무지스러울 수 있겠는가"라며 "남조선 괴뢰들은 아직도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동시에 저들의 몸값 역시 가늠할 줄 모른다"고 비난함.
- 또 "괴뢰 호전광들이 너무도 쉽게 '전쟁감수'나 '선제타격'을 올렸지만 그들은 진짜 불맛, 진짜 전쟁맛이 어떤지, 우리 군대의 '단숨에' 공격정신이 어떤 것인지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 라며 "전쟁폭언을 일삼는 극악한 민족반역의 무리들과는 더이상 말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응당하다"고 밝힘.

나. 경제 · 사회 · 문화

● 北 "개성공단 건드리면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2/6, 연합뉴스)

-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국방부 공개 北핵실험장은 영화 속 상상장면"(2/8, 우리민족끼리 TV)

- 북한은 8일 우리 국방부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내부 구조가 담겼다고 공개한 사진이 "예술영화에서 나온 상상 장면"에 불과하다고 우리민족끼리 TV를 통해 밝힘.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4일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구조를 분석해 발표하는 장면을 담은 '북의 극비 어디서 얻었나 했더니...'라는 제목의 2분17초짜리 동영상을 게재함.
- 이 동영상은 국방부가 북한 지하 핵실험장의 갱도 입구와 차단문 9개, 핵폭풍·잔해 차단벽 3개 등을 공개하고 분석하는데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도움까지 받았으며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이 이 극비의 결정적 증거로 내든 것이 북의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4부의 캡처 화면"이라고 주장함.

● 남북 긴장에도 작년 경제교역 역대 최고...20억\$ 육박(2/9, 연합뉴스)

- 9일 관세청이 집계한 '2012년 남북교역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대북 반출액은 8억9천626만달러, 반입액은 10억7천393만달러이며 반출액은 2011년보다 13.4%, 반입액은 19.3%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반출과 반입을 더한 교역규모는 19억7천18만달러로 2010년 최고기록(19억149만달러)을 2년 만에 갱신했으며 남북 교역은 개성공단과 연결된 도라산육로를 이용한 규모가 전체의 99%에 달함.

■ 기타 (대남)

- 【중통 논평】李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유지와 치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는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2중의 범죄로 된다"고 지속 선동 (2.4,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어맛고 전쟁을 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을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보였음. 북한의 핵 관련 표적 정보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다만 정 의장은 핵실험장 선제타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그런 능력을 기초로 전방 지역 및 서북 지역 도발, 후방 지역 테러 등 여러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확실히 억제하고, 도발시 단호하게 응징하는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994년 핵 위기 당시 북핵 시설이 영변에 집중돼 군사적 옵션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어떻게 흩어졌는지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함. 또한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은 작은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차량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사전에 탐지해 격파가 가능하겠느냐"고 근거를 들었음. 같은 당 김재운 의원도 "(핵 공격) 징후만 갖고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면서 "선제타격은 핵무기를 확실히 쏠 것이라는 물증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함.
- 이에 정 의장은 "실제 (핵무기를) 탐지해 타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격 능력을 가진 것 자체가 적에게 대단한 억제수단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함. 이와 관련해 무소속 김형태 의원은 "핵공격 징후 전이라도 특수부대 투입 등의 방법으로 핵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협력협정 체결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음. 진성준 의원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준전시 상황에서 김 장관이 급하지 않은 협정 체결을 위해 출국한 것은 위수지역 이탈이나 다름없다"며 해명을 요구함.

● 北 "美, '중대조치' 모르면서 핵실험으로 지레짐작"(2/9, 연합뉴스)

- 북한은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후회 막심한 손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날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자 '힘에는 더 큰 힘으로'란 기사에서 "최근 공화국(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한 제재결의를 배격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선포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은 공화국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선제타격까지 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고 비난함. 신문은 이어 "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추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



- 치도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럼에도 미국이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를 '핵위협'으로 오도하며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광분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취하게 될 공화국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명심할 것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보았댜 차례 질 것은 후회 막심한 손해뿐"이라고 위협함. 통일신보의 이런 주장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결심했다는 '국가적 중대조치가 제3차 핵실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6일에는 김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를 열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했다고 밝혀 핵실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 일으켰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뉴욕 폭격' 동영상에 불쾌감>(2/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터넷에 올린 선전용 동영상에 미국 본토가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정부가 불쾌감을 표시함.
- 빅토리아 놀랜드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에서 '뉴욕으로 보이는 도시가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동영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을 봤다"고 확인함. 놀랜드 대변인은 그러나 "여기서 그것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마치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함.
- 이날 브리핑에 등장한 문제의 동영상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2일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린 '은하 9호를 타고'라는 제목의 3분 36초 분량의 영상임. 주인공이 꿈속에서 '은하 9호' 로켓으로 발사한 스페이스 셔틀 '광명성 21호'를 타고 지구 주위를 도는 내용의 이 동영상은 마이클 잭슨 등 미국 유명 가수들이 1985년에 발표한 노래 '위아 더 월드(We Are the World)'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동영상에는 특히 후반부에 "아메리카 어디선가 검은 연기도 보입니다"라는 한글 자막과 함께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는 미국 본토와 성조기가 겹치는 화면이 등장함. 이어 "아마 강권과 전횡, 침략전쟁만을 일삼던 악의 소굴이 제가 지른 불에 타는 모양입니다"라는 자막이 나타남.
- 미국 언론들은 이날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의 비디오가 미사일 타격을 받은 미국 도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의 마천루가 보인다"고 소개함.



이에 대해 하원 군사위 산하 전략군 소위원회 마이클 터너(공화·오하이오) 위원장은 "꿈같이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북한의 협박이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함. 그는 "뉴욕 폭격 비디오는 북한의 일반적인 도발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들의 구상을 그래픽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안 정부는 한가롭게 있다"고 지적함.

- 터너 의원은 지난해 미 동부 연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고자 앞장서 제안함. 이 안은 백악관 반대로 기지 후보지 세 곳을 물색하는 수준에서 결정됐음.

다. 중·북 관계

● "조선 언제든 핵실험 가능"...中"사태 악화 안돼"(2/5, 인민일보)

- 2013년 2월 4일,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가짐. 이번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사는 "한국정부는 조선 측이 이미 핵실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언제든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조선의 핵실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이에 대해 화대변인은 "한반도 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관련 당사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일이자 공동의 책임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고 일관적이다. 중국은 지역 정세를 더욱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당사국이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수호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힘.

● 지난해 北-中교역액 사상 최대...60억 달러 돌파(2/6,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함. 6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60억 3천 39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 늘어남.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35억 3천 260만 달러로 11.6%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25억 130만 달러로 1% 증가에 그침.
- 이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적 고립 속에 북한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의 60% 정도는 광물자원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외교부 부부장 "한반도 핵무기 출현 반대"(2/6, 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거듭 밝힘. 6일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에 따르면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은 전날 홍콩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 그는 북한이 중국과 산, 강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도 덧붙임. 이 같은 발언은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3차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재차 던진 것임.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푸단(復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 선딩리(沈丁立) 부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안정에도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함. 장롄구이(張鏈圭) <王+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행동이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제지 되지 않으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라. 일·북 관계

● 北, 日 독도부서 설치는 "히스테리적 망동" 비난(2/, 연합뉴스)

- 북한은 6일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후안무치한 행위" 고 거칠게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의 신성한 영토를 생역지로 자기 땅이라고 떠드는 일본 반동들의 비열한 행위는 영토강탈에 환장한 자들의 히스테리적인 망동이며 역겨운 추태"라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각종 역사적 문헌은 독도가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우리 겨레의 소유로 되고 다스려진 신성불가침의 영토"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며 일본의 '독도강탈' 집착에는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이루려는 음흉한 기도가 깔렸다고 지적함.
- NHK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다룰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보도함.

마. 러·북 관계

● "北 김정은 방러 논의 아직 없어" <北 北 러대사>(2/6, 연합뉴스)

-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6일(현지시간) 밝힘. 티모닌 대사는 외교관의 날을 앞두고 귀국해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새 북한 지도부와 러시아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그는 "올해 10월로 러시아와 북한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65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북한과의 선린 관계 발전은 러시아 동북아 지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였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문제에서의 협력, 정부·의회·지방 정부 채널을 통한 접촉과 교류 지속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양국 간에는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의사를 반영하는 일련의 중요한 경제적 합의들이 체결됐다"고 설명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티모닌 대사는 북한이 3차 핵실험 의사를 밝히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국이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함.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임.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방안 모색을 지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 상원의장 방북 추진...북측 거부로 무산"(2/7, 연합뉴스)

- 러시아 상원 의장이 최근 북한 방문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의 거부로 방북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짐.
- 북-러 관계에 정통한 모스크바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이 지난달 28~30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직후 북한을 방문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고 전함.
-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은 방북 희망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러시아가 지난달 2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동참하면서 북측이 방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함. 마트비엔코 의장은 애초 북한 방문을 통해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경색된 한반도 정세 완화 방안과 북한 경유 가스관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북-러 양자 관계 증진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을 지낸 마트비엔코 의장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으로 지난해 11월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도 면담한 바 있음.
- 러시아 상원은 지난달 블라디보스토크 APPF 회의 기간에도 남북한의 의회 대표단 간의 별도 회담을 주선했으나 역시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음. 남북 의회 회담을 제안했던 상원 부의장 일리아스 우마하노프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측이 그런 제안을 했고 한국도 큰 관심을 갖고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러시아에선 상원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과의 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음. 지난 2004년에도 세르게이 미로노프 당시 상원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음. 미로노프 의장은 2009년에도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함. 두 번째 방문에선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음.

● **北외무차관 "北-러시아 관계 발전에 최선 다할 것"(2/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올해 러시아 외교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관계가 큰 성공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궁석웅 북한 외무성 부상이 8일(현지시간) 밝힘.
-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궁 부상은 이날 러시아 외교관의 날을 맞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주최한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올해는 러-북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6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강조함.
- 궁 부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불안정한 상황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정책과 이중잣대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음. 궁 부상은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우호적이고 상호 유익한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고 화답함.

바. 기타

●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 지도자 조사 촉구(2/6, 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의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유엔 보고서가 나왔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함. 그는 보고서에서 "국가기관과 개인의 책임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침해 행위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면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앞으로 행동에 관해 적절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함.
- 그러나 유엔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주문하더라도 구속력이 없으며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론적으로는 이런 권고사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데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은 지난달 28일 보낸 편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야 한다는 다루스만의 주장을 거부함. 앞서 지난달 나비 필리아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했었음.

● 北 "개성공단 건드리면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2/6, 연합뉴스)

-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통일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이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북한의 내각 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는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북한)는 6·15정신의 견지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존속을 바라지만 만일 그 누가 어떤 형태라도 개성공단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에게 대한 극악한 제재로 간주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특혜를 철회하고 그 지역을 우리의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드는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민경협은 2004년 7월 북한의 대남 경협기관들을 통합해 내각 산하 성(장관)급 기구로 출범함. 민경협은 산하에 남북교역 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개성공단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을 두고 있음.
-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북한에) 부과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민경협은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 통일시대의 산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침예한 최전연(최전선) 지역을 통째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며 "우리가 개성공단을 내준 것은 남조선 중소기업과 영세민들에 대한 동포애의 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함.
- 민경협은 "이번 제재 소동에 괴뢰 당국의 다른 부서도 아닌 대북정책을 주관한다는 통일부와 그 수장이 앞장에 서서 피해를 돌구는 것이야말로 경악할 일"이라며 "개성공단에 대해 제재요 뭐요 하는 것은 결국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격으로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함. 이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높음이 우리에게 대한 압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오산은 없다"며 "초래될 엄청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리명박 역적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이한구 "차당선인, 더 확실한 한미동맹 원해"(2/7, 연합뉴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현안을 협의·조율하기 위해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함. 이날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원내대표는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다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군사, 정치, 외교, 경제 동맹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박 당선인의 뜻을 전달하러 왔다"고 말함.
- 그는 특히 "마침 최근에는 북핵 문제가 있으니(박 당선인이) 그쪽에 우선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 살리기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주 자세한 협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임. 이들 대표단은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워싱턴DC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함. 이어 지난해 우리 정부가 매입한 옛 미국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을 찾아 현재 거주하는 티모시 젠킨스 부부와 함께 건물 곳곳을 둘러봄. 또 오는 7일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면담한 뒤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재미교포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열 계획임.
- 특히 이들은 미국 방문 기간에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최근 북한 핵실험 위협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예방한 것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음. 아울러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대표로 한 미국 방문 특사단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것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음.
- 그러나 한 외교 당국자는 "이번 정책협의대표단 미국 방문은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정책협의단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 짙다"고 설명함.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 2기' 출범으로 어수선했는데다 케리 국무장관도 최근 의회 인준을 받은 상태이고 국방부는 차기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고위 정책당국자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 또 다른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나. 한·일 관계

- 정부 "日 독도 전담부서 설치 용인못해…철회하라"(2/5,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며 철회를 공식 요구함.
 -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다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발표를 했다"고 강하게 비난함. 조 대변인은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발표한 것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며 시대 역행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조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한일간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타국 영토에 대한 공허한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함.
 - 일본 아베 정권이 독도전담 부서 설치에 나서고 우리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옴에 따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다. 미·중 관계

- 中, '美 전직 관리 釣魚島 발언'에 대한 입장 밝혀(2/4, 인민일보)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미국의 한 전직 관리의 다오위다오(釣魚島)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힘.
 - 한 기자가 "미국의 리처드 아미티지 전직 국무 부장관이 얼마 전 일본 NHK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0월 본인을 포함한 4명의 미국 전직 정계 주요인사 및 학자가 중국을 방문해 다오위다오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질문함.
 - 이에 대해 대변인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다. 중국은 다오위다오 문제에서 일관되고 명백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국의 지도자는 여러 차례 미국을 포함한 각국 방문자들에게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이는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 누구도 없앨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문제에서 역사와 사실을 존중하고 대외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내놓아서 안 된다" 라고 답변함.
- 미·중 외교장관 전화통화..北 도발 대응 논의(2/6, 연합뉴스)
 - 케리 미국 신임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양제츠(楊潔淸<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 위협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함.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은 외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양 부장,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했다"고 전함. 놀런드 대변인은 "양 부장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다"면서 "두 장관은 경제, 통상, 투자 부문 등에서 미·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함.
- 그는 특히 "이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수사(provocative rhetoric)'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아울러 북한이 국제의무를 어기고 추가적인 행동을 강행했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함. 미·중 외교장관의 이날 전화통화는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양국 간 구체적인 공조 여부가 주목됨. 놀런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규정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함께 단합해서 이를 감시하는 동시에(북한이) 추가 행동을 강행하면 우리도 추가 대응하겠다는 점을 북한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함.
-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에 따르면 양 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및 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명확, 단호하다"며 "반도 정세가 복잡, 민감한 만큼 당사국들이 신중한 태도로 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양 부장은 또한 관련국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중국은 현재 관련 동향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함. 양 부장은 이어 "관련국들이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반드시 대화를 통해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임.
- 케리 장관은 이밖에 양 부장과 이달 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리는 이란 문제 논의를 위한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회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함. 그는 또 애슈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말리 사태와 리비아 사태, 중동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놀런드 대변인은 전함. 케리 장관은 지난 1일 취임 선서 이후 한국, 일본 외교장관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의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른바 '전화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그는 또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외교안보사령부(DSCC)'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국무부는 밝힘.

● 중국, 미국에 "대북 특사 없다" 통보(2/7,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음. 7일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부부장급 당국자는 지난달 25일 방중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이 같은 중국 측의 입장을 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5일 베이징을 방문해 카운터 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비롯해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등과 잇따라 접촉했음.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자는 데이비스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말함.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제3국에 특사 파견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중국 당국자들은 대체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히는 전략을 구사함. 따라서 중국이 특사 파견 계획을 공식 부정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 저지 노력과 관련해, 자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에 국제사회가 과도한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일각에서는 중국이 더는 북한에 끌려 다니는 식의 외교 패턴을 반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북 접근 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현재 북한과 중국의 처지에서는 서로 특사를 파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음. 중국으로서는 특사를 파견하더라도 북한 핵실험을 만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외교적 실패'에 대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음.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특사가 다녀가고 나서 핵실험을 중단 또는 보류한다면 외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음. 더욱이 북한과 중국의 견해차도 커 현재로서는 양국이 최소한의 접점마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특사 파견을 어렵게 하는 요소임.
- 북한이 비핵화 포기 및 6자회담 사멸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 여기에다가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북 원조를 축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을 폈고, 북한의 관영 매체들도 중국을 대놓고 비난하는 등 양국 간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임.
-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이는 현재의 북중 관계 상황에 맞지 않은 얘기"라며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함. 이런 가운데 중국은 부부장-대사 채널을 통해 북한에 3차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베이징에서는 외교부 푸잉 부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수차례 불러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고, 평양에서는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 대사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당 국제부 부부장 등과 접촉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짐.



● **美 "北 핵실험 저지 노력 中에 감사"(2/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해 중국이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힘.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2087호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할 당시 우리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 회담 참가국 및 안보리 회원국들과 폭넓은 협의를 했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말함. 놀런드 대변인은 특히 "이들 국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을 뿐 아니라 국제의무 위반 행위가 추가로 있을 경우 또 다른 대응이 있따를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완벽한 협력'(completely in sync)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새 지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우려 성명을 내놨다"고 덧붙임. 이는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위협 이후 중국 정부가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주중 북한 대사를 여러 차례 초치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대북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5일 존 케리 미국 신임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명확, 단호하다"는 뜻을 전함. 또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불리한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이 북한의 일부 계좌를 동결시켰거나 가명 혹은 차명 계좌의 거래를 금지했다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라. 미·일 관계

● **"일본,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할 듯"(2/7, 연합뉴스)**

- 일본이 이르면 2017년부터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7일 보도함. 닛케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산 셰일 가스를 포함한 천연가스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이외의 나라에도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소개함.
- 이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기에 이르면 다음달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1순위로 승인을 얻을 것이 유력시된다고 닛케이는 보도함.
- 특히 주부(中部)전력과 오사카(大阪)가스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인가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업이 성사되면 2017년부터 연간 440만톤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일본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함.



- 미래의 에너지로 불리는 셰일가스는 진흙이 층층이 쌓인 뒤 물기가 빠지면서 굳은 암석을 뜻하는 '진흙퇴적암층(셰일)'에 함유된 가스를 말함. 신기술 개발로 채취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들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대폭 줄이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활용한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졌음. 그 와중에 작년 일본의 LNG 수입량은 8천730만여을 기록했다. 만약 일본이 상대적으로 값싼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대량 도입하게 될 경우 전력 사용비의 가파른 증가세를 늦추고, 무역수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넋케이는 전망함.

● 미·일, 섬 탈환 공동 훈련…중국 견제(2/11, 연합뉴스)

-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가 빼앗긴 섬을 되찾는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와 일본 자위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클레멘테섬 훈련장에서 적에게 뺏긴 낙도를 탈환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미·일 공동훈련을 벌이고, 언론에 훈련 장면을 공개함.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 난세이(南西)제도 방위강화책의 일환임. 중국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직후에 벌인 훈련이어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 미 해병대와 자위대의 공동 훈련은 2006년에 시작돼 이번이 8번째임. 이번 훈련에는 낙도 방위가 주임무인 나가사키(長崎)현의 서부방면 보통과 연대 등에서 최다 인원인 약 280명이 참가함. 9일에는 자위대원들이 미 해병대의 CH53 대형 수송 헬리콥터에 타고 섬에 상륙하는 훈련을 벌임. 자위대원들이 미군의 수직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에 탈 가능성도 있었지만 9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음. 지난달 15일에 시작된 이번 훈련은 22일까지 계속됨. 한편 일본은 이르면 내년 초에 공적개발 원조(ODA)의 엔 차관을 활용해 필리핀에 경비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1일 보도함.
- 이 또한 남중국해의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을 돕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음.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장비가 부족한 연안 경비대에 길이 40m인 경비함 10척을 배치하기로 했고, 일본에 ODA 제공을 요청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알베르토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에게 경비함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 일본은 이르면 내년 초에 교환 공문에 서명한 뒤 새로 만든 배를 잇달아 공급할 계획이다. 척당 비용은 수십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의 연안 경비 담당자를 연수시키는 등 인재 육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마. 미·러 관계

● 러 하원 의장 "美 유럽 MD 좌시하지 않을 것"(2/6, 연합뉴스)

- 러시아 고위인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의원들과 만나 면담하면서 "러시아는 모든 주요 국제 파트너들과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며 "단지 나토와는 아직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유럽 MD 문제를 거론함.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나리슈킨 의장은 "우리에겐 이 MD 망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술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함.
- 그는 "(나토가) 말로는 이 시스템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론 (이를 증명할) 법률적 강제 협정을 마련해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함. 나리슈킨은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MD망을 구축하면 우리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함.
- 미국과 나토는 현재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루마니아에 MD 기지, 터키에 MD 시스템 운용을 위한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러시아는 나토의 유럽 MD가 자국 핵전력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굳이 MD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면 이것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그러면서 미국이 이 같은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하고 MD 시스템 구축을 강행할 경우 신형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음.

바. 중·일 관계

● "중, 일본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 조준"(2/5, 연합뉴스)

- 중국 함정이 일본 구축함에 사격시 사용하는 레이더를 비춘 것으로 나타나 일본측이 항의하는 등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이 한층 고조됨. 5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당의 한 간부는 중국 함정이 수일전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사격통제레이더(Fire-control radar)를 비췄다고 밝힘. 오노데라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항의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 中 "日, 댜오위다오에 대한 불법적 행위 중지해야"(2/6, 인민일보)

-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과 공해에 선박과 전투기를 출동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며 성의 있고 실질적인 행동



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할권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힘.

-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중국 해양감시선이 얼마 전 장기간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아울러 중국 측은 일본 측에 사태를 악화를 가져올 행위를 피하길 요구하며 중일 양측은 협상을 통해 댜오위다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댜오위다오 진입 행위가 사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라고 질문함.
-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화대변인은 "중국정부의 댜오위다오 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백하다. 댜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공무선은 중국의 댜오위다오 해역에서만 정규 순찰을 진행했으며 이는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다. 또한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웃국가와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길 주장해 왔다"라고 답변함.

● 주일 中대사 "일본 측의 항의 제기 받아들일 수 없어"(2/6, 인민일보)

- 청용화(程永華) 주일 중국대사는 5일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관련 해역 또한 중국의 영해라고 강조함. 아울러 중국의 해양감시선은 정상적인 해역 순찰 공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의 교섭과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측이 중국 해양감시선의 공무 수행 방해를 중지하길 요구한다고 전함.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5일 청용화 대사를 만나 중국 해양감시선의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에 대한 항의를 제기한 바 청 대사는 일본의 교섭과 항의에 위와 같이 밝힘.

● 일본, 중·일 핫라인 구축 요청키로(2/7, 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 함정의 사격용 레이더 조준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군 당국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자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함.
- 일본은 중일 방위 당국간 긴급 연락 체제인 '해상 연락 메커니즘' 구축 협의를 재개하자고 요청할 계획임.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말함. 중일 양국은 2011년 7월 차관급 방위 회담시 핫라인을 구축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지난해 9월 일본의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를 계기로 세부 협의를 중단함.
- 미국도 중국 측의 센카쿠 주변 전투기 투입과 함정간 레이더 조준 등에 대해 "돌발 사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며 중일간 핫라인 구축을 재촉할 예정임. 미국과 중국은 2001년 남중국해 상공에서 벌어진 양국 전투기간 접촉 사고를 계기로 2008년 군 수뇌부간 핫라인을 설치함. 미국 내에서는 권력 이행기의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중국군 일부의 센카쿠 강경 대처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



니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국 전투기가 지난해 12월 이후 센카쿠 주변 상공에서 자위대 전투기에 50~100km 거리까지 근접 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보도함. 50km 거리까지 접근하면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할 수 있음. 지난달 10일 이후에는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 외에도 미 해군의 P3-C 초계기나 미 공군의 C-130 수송기 등 미군기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음. 중국은 쥘(殲)-10 전투기 외에 쿵징(空警)-2000이나 쿵징-200 같은 조기경보기를 투입했고, 일본도 F-15 전투기와 조기경보통제기 AWACS로 맞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센카쿠 주변 해역에는 미군의 조기경보통제기 AWACS와 조기경계기 E2C도 배치돼 중국 전투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음.

● 일본 "중국 레이더 조사" 영상 등 공개 검토"(2/10, 연합뉴스)

- 일본은 중국이 자국 선박을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기세를 올린 반면, 센카쿠 주변의 중국 측 움직임은 잦아든 것으로 알려짐.
-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9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영상기록 등 증거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그는 "일반적인 레이더는 빙글빙글 돌면서 경계 감시를 하지만 사격통제 레이더는 줄곧 (한 물체를) 쫓으면서 비춘다. (중국 레이더가) 우리나라 배를 한동안 쫓았다는 증거가 있다"며 "보통 사람들이 봐서 시각적으로 이해할만한 설명을 하겠다"고 말함.
-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7일 중국 측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핫라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함. 또 일본이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발표한 지난 5일 이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의 중국 선박의 움직임이 잠잠해졌다며 "중국도 '서로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한편 9일자 중국 인민일보 등 각 매체는 사격용 레이더 조사를 부정한 자국 국방부와 외교부의 공식 견해를 소개했을 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죄를 요구한 점은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사. 기. 타

● 미국, 아시아 중시정책 속 대만에 잇단 '당근'(2/5, 연합뉴스)

- 미국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는 가운데 최근 대만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잇따라 취하고 있음. 미국과 대만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만 외교관들의 미국 내 법적 신분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교관 면책특권 관련 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5일 전함.



- 이에 따라 주미 대만 외교관들은 불체포 특권과 법정 증언을 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외교관 면책특권 부여는 대만 당국이 미국 측에 즐기치게 요구해온 '민원' 사항임.
- 미국은 2007년 이후 중단됐던 대만과의 정례 무역회담도 3월 말 이전 재개한다고 최근 발표함.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대만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대상으로 지정, 대만인들이 최장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진푸충(金溥聰) 주미 대만 대표는 "2008년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가 역대 어느 때 보다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함.
- 대만 언론 등은 미국 측의 일련의 행보가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제1 야당인 민진당 관계자는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부상한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대만이 중국과 공조해 일본과 대항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런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에 '당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설명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